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774
----------	------

제출년월일 : 2023.10.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한국전선문화관은 당시 대구에 피란온 예술인들이 종군활동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국민을 위로하며 발전한 대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전선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한국전선문화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6조
(위탁사무의 기준, 위탁사무의 대상, 위탁사무 선정기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한국전쟁 당시 대구 피란문화예술인들의 활동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한국전선문화관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전선문화 재조명, 舊도심 근대 문화역사자원과의 연계 등 창의적인 영역을 민간의 전문성·경험을 활용하여 발전시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한국전선문화관 관리 및 운영(부대 전시시설·장비 포함)
- 한국전선문화관 안내, 홍보에 관한 사무
- 전선문화 관련 콘텐츠의 수집, 연구, 전시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대구 중구 북성로 104-11(향촌동)



- 규 모 : 지상 1, 2층 (연면적 227.4㎡)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한국전선 문화관	지상2층	77.75	미디어아트룸, 창고, 쉼터 등
	지상1층	149.65	전시실, 사무실, 안내데스크, 미디어월(외부)

마. 민간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대구문화관 위탁기간('23.1.~'25.12.)고려, 향후 대구문화관과 한국전선문화관 통합위탁 예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연 229,500천 원(시비)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내 역
합 계	229,500	
인 건 비	119,020	· 인력 3명(운영1, 시설1, 청소1)
경상경비	43,035	· 목재보존, 소모품비, 인쇄비 등
공 과 금	56,545	· 전기료(3,300천원*12) 등
일반관리비	10,900	· 기기렌탈, 프로그램 운영 등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신규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 적정

- 2023년 제3회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2023. 8. 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1**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 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2

문서번호	문화예술정책과 -12973	주무관	시각예술팀장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23. 8. 29.						
결재일자	2023. 8. 29.	박상현	박철환	김보란	권경선	김종환	서.서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	기획조정실장 김원근				
		조	예산담당관 박우훈				

한국전선문화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목 적

- 「한국전선문화관」 조성사업이 '23. 12월 완료(예정)에 따라 전문단체·법인 등에 의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위탁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04-11(향촌동)
- 규 모 : 지상 1,2층 227m²
- 방법/내용 : 공개모집 /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위탁비용 : 459백만원 정도('24년 229.5 / '25년 229.5)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심의 : '23. 10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3. 11월
- 위탁계약 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 : '23. 12월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문화예술정책과]

한국전선문화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완료('23.12월)에 따라, 전선문화 재조명 및 근대문화 자원 활성화 등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한국전쟁 당시 대구에 피란온 예술인들이 종군활동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국민을 위로하며 발전한 대구만의 독특한 문화자원인 '전선문화'를 재조명하고,
- 한국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아 지금까지 남아있는 舊도심의 근대문화자원들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거점공간 역할을 수행
- '23년 12월 완공 예정인 한국전선문화관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사업 추진계획('22.11.3.)

3 추진경과

-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1. 9. 10.
- 한국전선문화관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실시 : '22. 5. 19.
-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11. 3.
- 한국전쟁 전선문화콘텐츠 발굴·보존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22. 11. 21.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통보 : '23. 8. 18.

4 위탁개요

1. 수탁기관 : 공개모집으로 선정

2. 위탁유형 :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市소유시설의 운영·수반사무를 민간에 위탁, 그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3. 위탁기간 : 2024.1.1. ~ 2025.12.31.(2년)

★ 대구문학관 위탁기간('23.1~'25.12)고려, 향후 대구문학관과 한국전선문화관 통합위탁 예정

4. 위탁시설

○ 시설명 : 한국전선문화관

○ 위 치 : 대구 중구 북성로 104-11(향촌동)



- 조성 총사업비 : 39억원(국 9.75, 시 29.25)
- 조성사업 기간 : 2022년 ~ 2023년
- 시설구성(규모) : 지상1, 2층 227.4㎡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한국전선 문화관	지상2층	77.75	미디어아트룸, 창고, 쉼터 등
	지상1층	149.65	전시실, 사무실, 안내데스크, 포토부스 등

5. 위탁범위

- 한국전선문화관 관리 및 운영(부대 전시시설·장비 포함)
- 한국전선문화관 안내, 홍보에 관한 사무
- 전선문화 관련 콘텐츠의 수집, 연구, 전시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구광역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7. 위탁비용(안)

- 총 위탁비용(2년간) : 459,000,000원 정도

구 분	민간위탁운영비(원)		내 용
	2024년(12개월)	2025년(12개월)	
인건비	119,020,000	119,020,000	인력 3명(운영1, 시설1, 청소1)
경상경비	43,035,000	43,035,000	목재보존, 소모품비, 인쇄비 등
공과금	56,545,000	56,545,000	전기료(3,300천원*12), 4대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10,900,000	10,900,000	무인경비, 프로그램운영, 기기렌탈 등
합 계	229,500,000	229,500,000	
총 계	459,000,000		

* 조성용역 참고 및 동종 유사시설 비교검토 산출

5 민간위탁 추진방법

1. 추진절차 개요



2.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고시기 : 2023. 11월중
- 공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 응모자격 :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심의·결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 ▶ 위 원 : 6~9명 이내(위원장 포함),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
-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中 호선 ※ 추후 별도계획 수립

○ 선정기준

- 사업수행 의지, 책임능력과 공신력
- 전문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경험과 이해도

3. 위탁계약 주요내용

- 위탁목적, 수탁기관 성명·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 시설·장비 내역 및 그 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정산, 수입금의 징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감사,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제3자 위탁금지, 회계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

6 기대효과

- 전쟁기 당시 예술가들의 활동자료 수집 및 발굴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근 근대문화자원들과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7 향후일정

- | | |
|----------------------------|------------|
|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 '23. 10월 |
| ○ 수탁기관 모집공고 | : '23. 11월 |
|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수탁자 선정) | : '23. 11월 |
| ○ 위탁계약서 일상감사(감사위원회) | : '23. 12월 |
| ○ 위탁계약서 적정성 심사(법무담당관) | : '23. 12월 |
| ○ 위·수탁 계약 체결 | : '23. 12월 |

붙임1**관련 법령 및 규정****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한국전선문화관 전시콘텐츠 구성[안]

위치	구 분	주 요 내 용	이미지 예시
1층	전선문화 전시 (1구역)	- 6.25전쟁 발발 후 상황 소개 - 대구로 몰려온 전국의 피란민 풍경 재현	
	전선문화 전시 (2구역)	- 종군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선문학 소개 - 키오스크로 작품 검색 및 열람 지원	
	전선문화 전시 (3구역)	- 음악, 선전물 등 다양한 장르의 전선문화 소개 - 영화 배경 포토부스 제공	
	전선문화 전시 (4구역)	- 휴전 이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대구 소개 - 대구에 남은 예술인들 조명	
2층	실감형 미디어 아트룸	- 전선문화를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상시제공 - 필요에 따라 기획전시 제공	
	커뮤니티 공간	- 세미나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 - 필요에 따라 미디어 아트룸 개방하여 사용	

붙임3**소요예산 산출기초**

○ 인건비

구 분	비 용(원)	비 고
기 본 급	97,200,000	3명(전시행정1, 시설유지1, 청소1)
제 수 당	4,000,000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
상 여 금	8,100,000	월 기본급의 100%
퇴직급여	9,720,000	기본급의 10%
합 계	119,020,000	

○ 공과금 및 일반관리비

구 분	비 용(원)	비 고
공 과 금	56,545,000	전기료 3,300,000원 × 12개월 = 39,600,000원 수도, 통신 / 4대보험료 등 = 16,945,000원
일반관리비	10,900,000	개관식 및 프로그램 운영 5,000,000원 기기렌탈비 191,660원 × 12개월 = 2,300,000원 무인경비 및 화재감시 3,600,000원
합 계	67,445,000	

○ 경상경비

구 분	비 용(원)	비 고
수리수선비, 소모품비	18,835,000	목재보존처리비, 목재긴급수선비 7,000,000원 사무용품, 청소도구 구입 5,000,000원 기념품 제작, 유물관리 등 6,835,000원
복리후생비	7,000,000	직원 복리후생비 3,000,000원 여비 및 교통비 4,000,000원
도서인쇄비, 법정경비	17,200,000	리플릿, 홍보물 인쇄 9,000,000원 소방,전기 안전대행 수수료 등 8,200,000원
합 계	43,035,000	

붙임4**위탁계약서(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 (수탁자, 이하 “△△”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선문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한국전쟁 당시 대구로 피란 온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전선문화를 정립하고 대구 도심 근대문화유산 활용의 거점공간 조성의 목적을 위해 한국전선문화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선문화관 관리 및 운영
 - 전시관 및 부대 전시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
2. 전선문화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3. 대구 도심 근대문화유산 연계 및 거점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탁시설, 장비 등)은 [붙임1]과 같다.

③ 제1항의 위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위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와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계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의 예산 또는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이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와 “시”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상호 협의 하에 수립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와 “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상호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와 “시”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 및 자문기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⑥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은 대구광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은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이 이 계약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탁기간 만료 시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은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 ⑨ “△△”은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재해 예방) “△△”은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제정법 및 대구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회계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하고, 그 집행 잔액은 시의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④ “시”는 “△△”가 수탁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용료 등의 수입금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⑤ “△△”은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는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감사, 관리·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자 근로조건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관리·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감사, 관리·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 및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하여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지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시”는 “△△”과의 위탁기간 만료 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 관리·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① “시”와 “△△”은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체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은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시”는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가 마등급인 경우, “시”는 “△△”과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은 위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② “시”는 “△△”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6조(보험가입)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 ② “△△”은 이 계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이 이 계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 등을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 또는 그 임직원이 위탁 및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이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③ “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2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 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이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을 비

뿐만 아니라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리·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시” 대구광역시

시 장 홍 준 표

“△△” △△△△△(대구광역시 ○○구 ○○로 ○○)

대표자 ○ ○ ○